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Vol.25

D R &
A J 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긴다고 합니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 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됐으며,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누적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20419 환경부 –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해 '22년 올 한 해에만 수소산업 전 주기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1,7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보다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신규 R&D 과제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10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② 수소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기체수소 대비 약 1/800로 부피 절감이 가능한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수소탱크, 압축기 등 수소설비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③ 수소 활용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모빌리티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주입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및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는 목표를 알렸습니다.

④ 수소 안전 분야는 해외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주기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20406 산업통상자원부 – '26년 연간 1,000톤 그린수소 생산 실증 지원

고용노동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4.11(월)부터 5.31(화)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실작성·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인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스스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숙지 등을 위해 가급적 조속히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교육 및 홍보 또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첨3][보도자료] 220410 고용노동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화학사고예방과)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 정책이 본격화하며 규제를 면해주는 무상 할당량은 대폭 줄어들 상황인데, 탄소배출권 가격은 요동치고 있어서 재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1년 새 36%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t당 1만5400원이었던 KAU21(2021년 배출권) 가격은 올해 초 3만5100원까지 올랐으며 지난 8일엔 t당 2만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에 제공된 온실가스 무상 할당량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상용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무리한 감축 목표 설정으로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탄소배출권값 1년새 36% 급등…기업 '탄소부채' 벌써 3000억 (중앙일보 4월 11일자 보도)

2. 정부가 기업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低)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에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지원은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 금리는 최저 1.3%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업 탄소중립 앞당긴다…5년간 1.7조 융자지원 (한국경제TV 4월 17일자 보도)

3. 국민연금이 지난해 석탄·발전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산업 네거티브 스크리닝 연구용역을 담당한 딜로이트안진이 제시한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석탄발전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연기금들이 채택하고 있는 매출 비중 30%와 50%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정성평가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안건을 정리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다만 이에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전문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석탄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 윤곽…이달말 논의 (이데일리 4월 13일자 보도)

4.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는 2025년부터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비행기에 친환경 항공연료(SAF)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AF란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자원이 아닌 동물성·식물성 기름, 해조류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로,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항공업계 내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꼽힙니다. 다만 문제는 SAF가 화석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보다 2배~5배가량 비싸다는 점과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SAF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현대오일뱅크와 바이오항공유 사용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SAF 생산 연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U, 25년 '친환경 항공유' 의무화···항공업계, 공급·비용부담 (서울파이낸스 4월 14일자 보도)

5.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ESG가 새로운 투자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ESG 평가'에 대한 규제·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15일 ESG투자 전문매체인 'Responsible Investor'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ESG평가와 관련해 이해상충 규정, 평가방법론에 대한 최소 공시 요구사항, 평가기관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앙집중식 EU등록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기관이 등급 결정시 'ESG요인 고려 여부와 ESG요인의 영향'을 공시하는 한편, ESG요인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투자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ESG평가기관과 데이터 제공업체들이 투자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규제 감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U집행위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ESG 평가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고 EU의 ESG평가기관과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입니다.

EU 집행위 'ESG 평가' 규제감독 본격화 (내일신문 4월 15일자 보도)

DR&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2022년 Vol.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 ~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H. www.draju.com